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브리프
BRIEF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5. 10 Vol 5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T. 055-713-7074 F. 055-713-7093 www.gnwff.or.kr

김보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경남 여성 고용구조와 취업자 증감에 대한 요인 분석

01. 경남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동향

02. 경남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분석

03. 결론 및 시사점

■ 지역의 취업자 수 증가는 지역 경제의 성장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임. 하지만 단순한 취업자 수 증감만으로는 지역의 고용 현실을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취업자 변화가 노동공급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효과인지, 노동수요 측면에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률 효과인지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요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요인분해 분석은 실질적 근거에 기반한 정밀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

■ 이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경남지역의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요인을 인구효과와 고용률 효과로 분해·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 요인과 성별 고용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01. 경남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동향

1) 생산가능인구

■ 경남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1,205천 명에서 2019년 1,427천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남성은 2021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향후 취업자 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2) 고용률

■ 성별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2012년 47.4%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54.2%로 정점을 나타냄. 반면 남성 고용률은 2000년 70.9%에서 증가하여 2004년 74.9%를 정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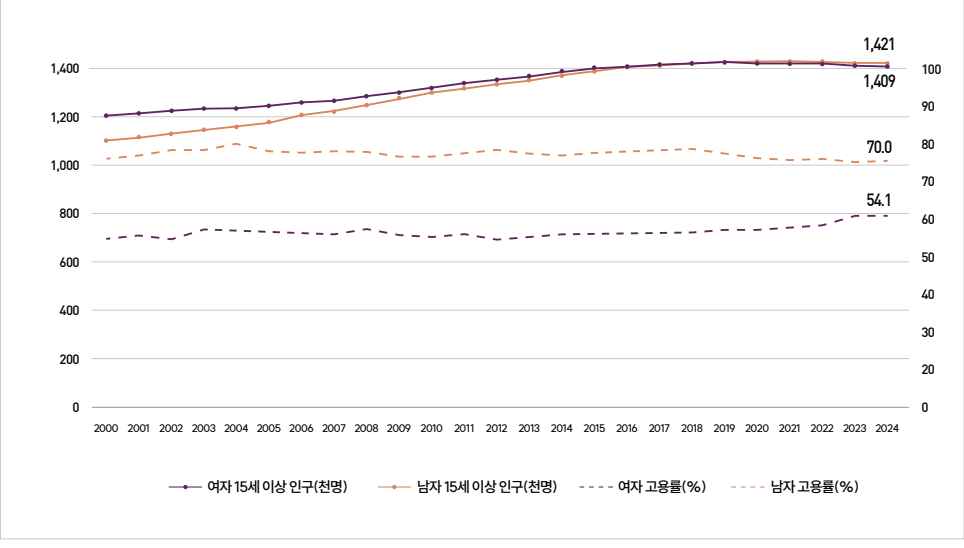
-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4.0%p로 가장 컸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 19.2%p, 2023년에는 15.5%p로 축소됨.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성별 고용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성별 취업자 수 추이(2000~2024년)를 보면, 여성은 2000년 577천 명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증가하여 2023년 76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2000년 784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040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하였음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경남은 2022년까지는 생산가능인구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이 유지·확대되는 국면을 보여왔으나, 최근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공급 기반이 약화되는 국면이 나타남. 따라서 향후 취업자 수 변화는 인구감소라는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감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경남 성별 생산가능 인구·고용률 (202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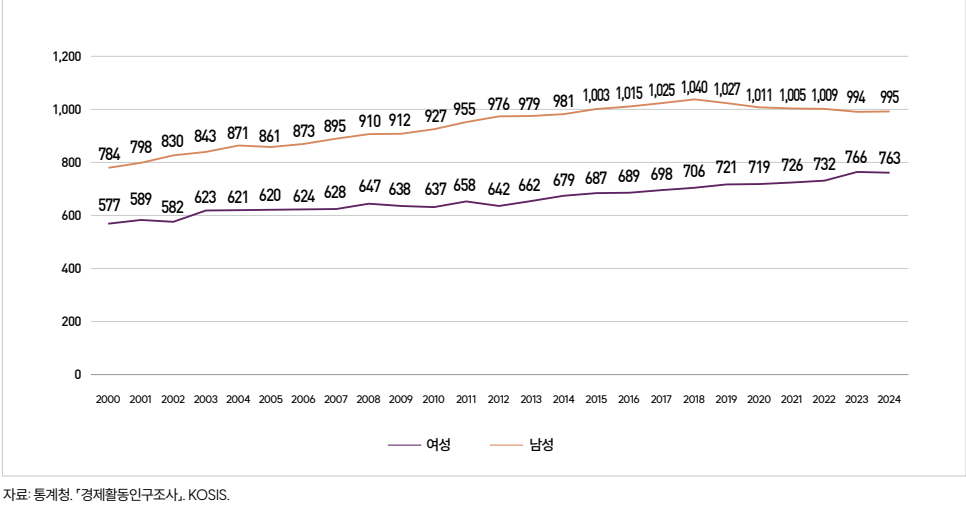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2 경남 성별 취업자 수 (2020~2024)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02. 경남 성별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분석

■ 취업자 증감은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고용률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음. 즉 동일한 고용 환경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면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인구가 증가하면 고용 여건이 동일하더라도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에서 정확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증감이 인구효과와 고용률효과 중 어느 요인의 영향이 큰지를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본 연구에서 취업자 증감의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였음.[1] 이때의 요인 분해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인구 및 고용률 변화가 취업자 수 증감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노동공급 측면 요인(인구효과): 고용률이 전년(동월 혹은 동분기)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인구변화에 따라 취업자 수가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측정
- 노동수요 측면 요인(고용률효과): 인구 규모가 전년(동월 혹은 동분기)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고용률 변화로 인해 취업자 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측정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분석>

E_t =취업자 수, ER_t =고용률, P_t =생산가능인구, η_t =기타효과

$$E_t = P_t \times \frac{E_t}{P_t} = P_t \times ER_t$$

$$\Delta E_t = \Delta P_t \times ER_t + P_t \times \Delta ER_t + \eta_t$$

1) 경남 연도별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분석

■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의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감을 인구효과와 고용률효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2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해 경기변동 등 노동수요 요인을 반영한 고용률 효과는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노동공급 측면의 인구감소 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음([그림 4] 참조)

-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대부분 인구효과에 의해 견인된 반면, 2022년 이후에는 인구효과가 오히려 취업자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전환하였음

■ 경남 여성의 전년 대비 취업자 수 변화를 인구효과와 고용률효과로 분해한 결과, 2024년 여성 취업자는 전년 대비 1천 명 감소하였으며, 이 감소에는 인구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 2020년 이전에는 인구효과가 여성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폭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특히 2006년, 2007년, 2017년의 경우 고용환경 등을 반영한 고용률효과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인구효과로 인해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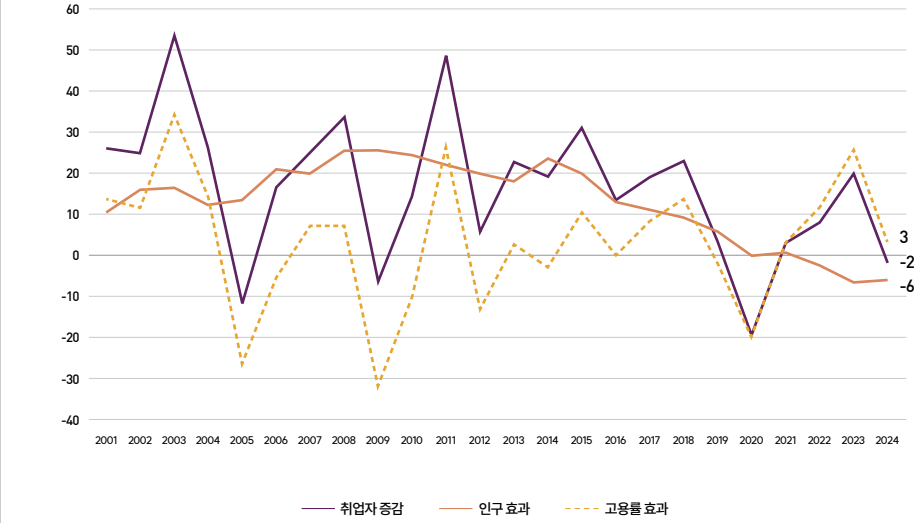
■ 경남 남성의 전년 대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21년까지는 인구효과가 취업자 수 증가 또는 감소폭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인구효과가 취업자 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특히 2024년에는 인구효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에도 2006년, 2008년~2010년, 2013년, 2014년에는 고용률효과에 따른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인구효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 정대희, 김지운(2017).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KDI.; 정재현(2021). "청년층 고용동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단위: 천명,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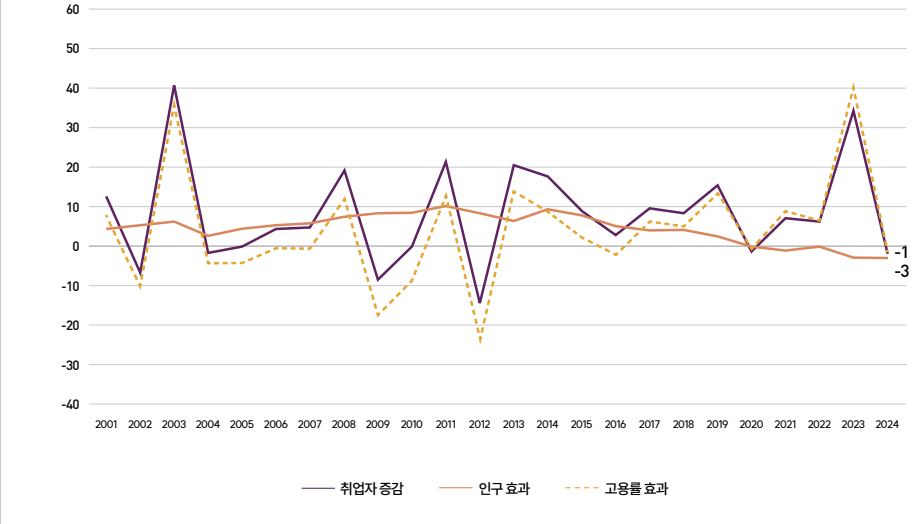
그림 3 경남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2021~20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단위: 천명,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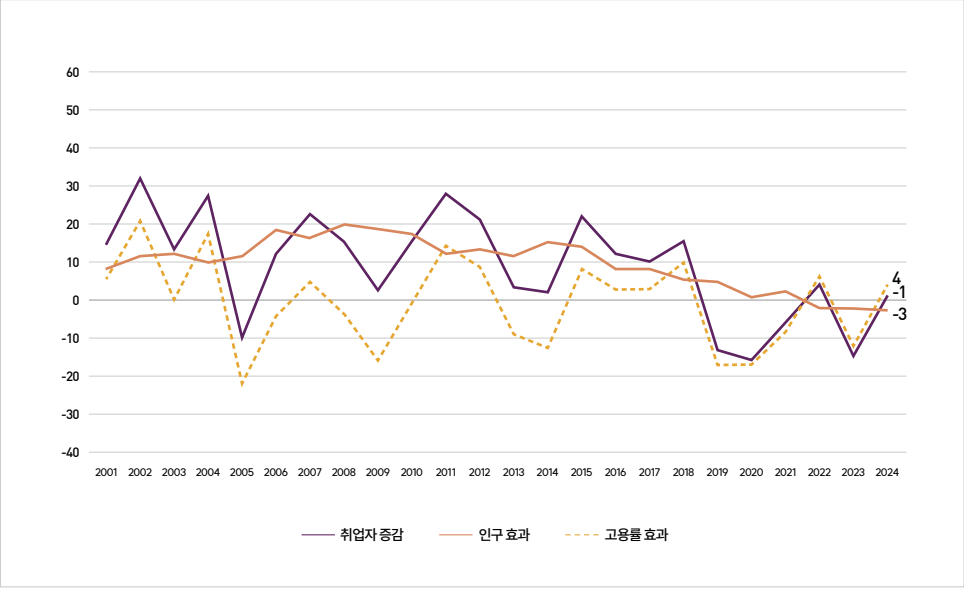
그림 4 경남 여성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2021~20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단위: 천명, 전년대비)

그림 5 경남 남성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2021~20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2) 경남 성·연령별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분석

■ 경남의 취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5,453명 감소하였음. 이중 인구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는 6,945명 감소, 고용률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는 1,498명 증가하여, 경남의 취업자 수 감소는 주로 노동공급 축소에 따른 인구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인구효과를 살펴보면, 15~19세, 20대와 30대, 40대의 취업자 수가 각각 57명, 10,573명, 10,178명, 9,648명 감소하였고,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4,325명, 14,515명이 증가하여, 청·중년층의 인구감소와 고령층의 인구 증가가 노동시장 구조의 세대전환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고용률효과에 따른 취업자 수는 20대(-14,004명)와 50대(-7,165명)에서 감소했으며, 그 외 연령대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 인구효과와 고용률효과 모두에서 감소세를 보여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순감폭이 가장 컸음. 이는 향후 청년층 대상 지역 정착 및 일자리 진입 촉진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함

■ 성별 분석 결과, 2024년 상반기 기준 경남의 여성 취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6,027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인구효과로 3,112명 감소, 고용률효과로 2,92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탐

- 20대 여성은 전분기대비 10,675명 감소하여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인구효과(-4,269명), 고용률효과(-6,773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0대 여성은 인구효과로 4,744명 감소하였으나, 고용률효과로 10,590명 증가하여 고용률효과가 인구효과로 인한 취업자 감소를 상쇄함
- 반면 50대 여성은 인구효과로 2,429명이 증가했으나, 고용률효과로 8,041명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취업자 수는 감소함. 이는 중장년 여성층의 고용 유지 및 직무전환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줌

■ 남성의 경우, 인구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는 3,811명 감소했으나 고용률효과로 4,402명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취업자 수는 574명 증가함

- 20대 남성은 인구효과(-6,279명)와 고용률효과(-7,251명) 모두 감소하여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나타남
- 30대는 전분기대비 185명 감소했으나, 인구효과로 인해 감소한 취업자 수를 고용률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가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경남 성·연령별 취업자 수 변동 분해

(단위: 명, %, 전년동분기대비)

구분		경남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2024년취업자 순증감(A+B+C)
		A. 인구효과	B. 고용률 효과	C. 기타효과	
전체	계	-6,945	1,498	-6	-5,453
	15-19세	-57	1,581	-16	1,508
	20-29세	-10,573	-14,004	832	-23,745
	30-39세	-10,178	15,938	-587	5,173
	40-49세	-9,648	9,264	-222	-606
	50-59세	4,325	-7,165	-67	-2,908
	60세이상	14,515	592	19	15,126
여성	계	-3,112	-2,927	12	-6,027
	15-19세	46	1,028	13	1,087
	20-29세	-4,269	-6,773	366	-10,675
	30-39세	-4,744	10,590	-488	5,358
	40-49세	-6,872	3,016	-124	-3,979
	50-59세	2,429	-8,041	-94	-5,705
	60세이상	6,606	1,245	38	7,890
남성	계	-3,811	4,402	-17	574
	15-19세	-67	505	-16	422
	20-29세	-6,279	-7,251	459	-13,070
	30-39세	-4,993	4,951	-142	-185
	40-49세	-1,828	5,242	-41	3,373
	50-59세	1,808	982	7	2,797
	60세이상	7,981	-722	-24	7,236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각 연도 상반기)-C형 원자료 분석,. MDIS.

3) 경남 성별·시군별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분석

■ 경남의 성별·시군별 취업자 증감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분기대비 여성 취업자 수는 시지역 전반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천시(-419명)를 제외한 모든 시지역의 여성 취업자 수가 전분기대비 증가하였고, 반면 군지역은 10개 군 중 7개 지역-남해군(-926명), 거창군(-606명), 의령군(-394명), 함양군(-284명), 합천군(-72명), 산청군(-32명)이 취업자 수가 전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지역 중에서는 창원, 진주, 통영, 거제는 인구효과에 따른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률 효과로 인한 취업자 증가폭이 더 커서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사천의 경우 인구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고용률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가 감소해서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분기대비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한 군지역의 경우, 산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효과와 고용률 효과 모두가 취업자 감소로 나타났고, 특히 의령, 남해, 거창의 경우 고용률 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인구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 노동 수요 측면의 상대적 취약성이 나타남

■ 남성 취업자는 시 지역과 군 지역 각각 4개 지역에서 전분기 대비 취업자 수 감소가 나타났으며, 시 지역에서는 여성보다 감소 지역이 더 많고, 군 지역에서는 감소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시지역 중 진주, 김해, 사천, 사천은 모두 전분기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진주는 인구효과와 고용률효과 모두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 반면, 김해와 사천은 인구효과는 증가했으나, 고용률효과로 인한 감소가 더 커서 취업자가 감소했고, 창원은 고용률효과로 인한 증가보다 인구효과로 인한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 중 남해군은 취업자 감소폭이 833명으로 가장 컸으며, 군 지역 중 유일하게 고용률 효과가 감소한 지역이었음

표 2 경남 성별 시군별 취업자 요인 분석

(단위: 명, %, 전년동분기대비)

구분		여성				남성			
		인구효과	고용률 효과	기타효과	취업자 순증감	인구효과	고용률 효과	기타효과	취업자 순증감
시지역	창원시	-1,927	3,066	17	1,156	-4,318	3,498	-90	-911
	진주시	-303	1,574	96	1,367	-1,269	-2,871	32	-4,108
	통영시	-242	1,998	-43	1,714	-288	867	9	588
	사천시	72	-510	18	-419	182	-334	-8	-160
	김해시	401	2,068	12	2,481	259	-1,187	22	-905
	밀양시	84	1,368	32	1,483	-17	1,729	3	1,715
	거제시	-37	1,851	7	1,822	2,765	1,697	33	4,495
	양산시	678	3,994	78	4,750	437	-302	-30	105
군지역	의령군	-195	-207	8	-394	-156	91	-7	-72
	함안군	-198	1,168	-26	945	85	200	14	299
	창녕군	-201	258	10	67	-77	923	0	846
	고성군	-284	330	-19	26	-20	608	9	597
	남해군	-286	-646	6	-926	-360	-492	20	-833
	하동군	-178	246	-8	59	-256	340	5	89
	산청군	-66	47	-13	-32	-137	0	-4	-141
	함양군	-221	-68	5	-284	-202	265	0	62
	거창군	-87	-534	15	-606	-153	492	-2	337
	합천군	-290	223	-6	-72	-223	104	-8	-12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각 연도 상반기)-A형 원자료 분석」. MDIS.

03. 결론 및 시사점

■ 경남의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 국면에 진입했고, 요인분해 분석 결과 2021년 이후 인구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는 감소로 전환되었음. 같은 기간 고용률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는 증가했으나, 인구효과로 인한 감소폭이 더 커서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지역 인구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노동공급 기반 약화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인구감소에 대응한 노동공급 확충과 고용률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성별·연령별 분석 결과, 20대 청년층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인구효과와 고용률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따라서 청년층을 위해서는 노동공급(정주, 인구유입)과 노동 수요(일자리, 매칭)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함

- 청년층 정책으로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리빙랩형 공공임대, 교통·문화·여가 복합 패키지 구축 등)과 지역 주력산업 연계 단계형 진입 프로그램의 상시화(기술교육-현장실습-인턴-채용, 학기·방학 트랙)가 필요함. 또한, 공공-중소기업 공동채용 박람회의 분기별 정례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50대 여성의 경우, 인구효과로 인해 취업자 수는 증가했으나 고용률효과는 감소하여 중장년 여성의 고용 유지와 직무 전환 등 노동수요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했음

- 50대 여성 대상 정책으로는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기술전환에 대비한 직무전환·재배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확대 등 중장년 여성의 신규 진입과 근속 유지를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분석 결과, 다수의 군 지역에서 여성 취업자의 인구효과와 고용률효과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군지역의 고용 취약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군지역에서는 인구 유입 촉진과 고용률 제고를 병행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했음

- 군지역의 열악한 의료·교통·교육 인프라 보완과 이주·통근 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지역 자원 연계형 창업 지원(로컬푸드, 관광해설 등)을 확대하고, 시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